

내년부터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본격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누구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도 복지여성보건국, 도내 모든 응급의료기관과 타 시도 화상전문병원 등 2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의료공백 장기화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응급의료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도·소방·의료기관 협력 기반, 응급환자 이송 및 수용 체계 개선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기존 119구급대가 각 병원에 전화로 수용 여부를 문의했던 것과 달리, 119구급대 스마트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장 구급대원이 표준화된 환자 정보를 단말기 통해 다수의 의료기관에 동시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실시간 수용가능 여부를 응답하여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병원을 신속히 선정·이송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여성보건국과 소방본부 주관으로 9월 지역응급의료협의체 사전 설명회와 시연회를 열고, 10월부터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협조를 구한 결과 도내 모든 응급의료기관 등 22개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특히, 도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화상환자를 위해 타 시도의 화상치료 전문병원인 대전화병원,

시범 결과 응급실 1시간 이상 대기건수 29% 줄어듬 구급상황관리 전담조직 신설·구급대원 현장처치 집중

베스테인병원(오송)과 협력해 신속한 이송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정확한 환자평가를 위해 모든 구급대원들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 훈련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범운영 성과, '1시간 이상 대기 29% 감소'... 본격 시행 준비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활용 및 응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TF팀을 구성해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시범운영 결과 1시간 이상 대기 사례가 29% 감소하고, 병원 이송 시간도 평균 42초(3.5%) 단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됐다. 병원 응답률도 초기 18%에서 6주 차에 44%로 상승해 의료진의 협조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스템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병원 응급실을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구급상황관리 전담조직 신설 및

권역센터 병원선정 코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응급환자 이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신설해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장에는 소방령을 임명하고, 구급 품질관리 전문가와 구급대원 출신 팀장 4명을 중심으로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자격자 16명을 배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병원 선정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병원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개입해 이송 병원을 직접 선정한다.

또한, 복지여성보건국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에 병원선정 전문 코디네이터 4명을 배치해 병상 현황과 의료진 가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요청에 즉각 응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병원 선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급대원 현장처치 집중, 신속한 병원선정, 도민의 안전한 의료혜택 기대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도입

을 통해 구급대원은 병원 선정 부담이 줄어들어 현장 응급처치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구급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분산 이송과 표준화된 환자 정보 수신을 통해 응급실 과부하를 방지하고, 의료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도민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고 적합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소방본부, 복지여성보건국, 의료기관 간의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지속하고, 병원 선정 응답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아전문센터 및 심뇌혈관 등 특수 진료과에 대한 병원 선정 특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은 도내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 보건,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신뢰받는 응급의료 안전정착을 이루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 여론조작으로 악용 않도록 개선

민주 윤준병 의원,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 대표발의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가 여론조작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작 의혹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에 대한 법적 관리감독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를 악용해 선거여론조사가 후보자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선거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를 의뢰받기 위해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임의적인 표본추출 또는 자체적인 변조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발생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선거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실제서, △표본 추출,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장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를 의뢰받기 위해 선거 컨설팅이나 유권자DB 등을 제안하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가 전화를 이용해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만호 기자·정음=김태환 기자

민주 한병도 의원, '불법 기업 내란 국조특위' 간사 위원 선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윤석열 정부의 위헌·부패·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한 의원은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국회 차원의 12·3 비상계엄 및 내란 행위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이날 민주당이 위원구성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위헌·위법성과 국회 접거 경위 등을 밝혀내기 위한 절차에 즉각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조사 범위와 일정, 증·참고인 채택 등을 주도하면서 진상규명에 앞장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해야 12·3 계엄, 10·26 12·12 떠올라... 대단히 놀라워"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로 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마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론의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에서 야당의 재판관 임명

추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현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저와 관련된 문제"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과거 10·26 사건, 12·12 사태가 떠올랐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한 직후였다. 막 집에 들어와 쉴 TV를 켜는데 자막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자막을 봤다"며 "모든 국민들께서 그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단히 놀라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교 부근에 있었고 그 이후에 12·12 비상계엄 사태가 확대되어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등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요건 충족에 대해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루어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묻는 질문엔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뉴스

장수군의회 임사회 개최

장수군의회의(회장 최화주)가 23일, 1일간 제370회 임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분회에서는 장수군수 재출한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최화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또한, '생활 인구 활성화를 위한 장수군 관광개발 제안'에 대해 최한주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민주 전주 지역위 '尹 탄핵 보고대회' 성료

이성운 의원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한 전북이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을·병 지역위원회가 지난 22일 합동으로 개최한 '국민과 함께 승리한 윤석열 탄핵 보고대회'가 500명 규모의 전주대학교 슈퍼스타홀을 가득 채운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전주 5)의 사회로 진행된 보고대회는 통기타 가수 스윗 포테이토의 공연으로 시작부터 한껏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어 12·3 윤석열 내란사건'의 단초가 된 불법·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시민 승리의 순간들을 영상으로 담아내 깊은 감동을 전했다.

시민과 당원들로 구성된 시국 발언대는 전영배 전주시 노인회장이 포문을 열고, 정태성 전주시를 청년위원장이 청년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호소하는 등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구속'의 뜨거운 열기가 대회를 가득 채웠다.

국회 탄핵소추 위원이자 대회를 주관한 이성운 의원은(전주을·사진) 보고 발언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서의 핵심 조항들을 열거하며, "초등학생도 윤석열 탄핵을 외칠만큼 깨어있는 전북"이라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한 전북이 윤석열 탄핵을 앞장서 안겨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내민들의 찬조 연설도 대회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쿠데타가 영위할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자"고 연설에 큰 호응을 받았으며, 김관영 도지사도 "과연 시기를 앞당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란 수괴의 체포 및 구속"이라며,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경험을 시민과 함께 공유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국민과 전주 시민이 함께 뜻을 모아나기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확실히 지켜낼 수 있다"고 역설했으며, 방용승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아직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어떠한 노릇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을 가로막고 있다"며 여론에 날을 세우고, 참가자 모두 구호를 연호하며 대회가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탄핵보고대회는 중간 보고대회로써 윤석열 탄핵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확정된 후 최종 보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 군산김제부안을지역위,尹 탄핵 당원보고대회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지역위원회(위원장 이원택)는 23일 오전 9시와 10시30분 김제와 부안지역에서 국민승리 윤석열 탄핵 당원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계엄사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보고와 함께 주요 피의자의 구속수사 등을 촉구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 행위로 피의자 윤석열은 즉각 체포되고 파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심판과 신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고대회에서는 △지역위원회 활동 현황 △내란 혐의 수사 진행 상황 △탄핵 절차 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이 논의됐다. 지역위원회는 지역과 전

국적 연대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당원들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과 특별검사 임명 등 내란 수사와 대통령 파면 과정을 국민의 편에서 판단해 주기를 촉구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만호 기자